

민주 광주 광역의원 패자부활전, 하위 20% 부활 단초 됐다

1차 경선 탈락에도 본선행...중대선거구 도입 영향 조직·인지도 당락 좌우...의정활동 평가 '유명무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역의원 경선에서 의정 활동 하위 20%로 평가돼 감점을 받았던 현역 의원들 상당수가 본선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내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 시의원들

이 경선을 1차 경선을 통과하거나 패자부활전 성격의 2차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위 20% 대상자는 경선에서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받는다. 다만 시장은 구체적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 정가에서는 하위 평가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역 시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경선에 나서지 않았고, 나머지 3명은 모두 민주당 후보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대선거구 도입에 따른 추가 경선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이들에게 주어진 재도전 기회가 하위 20% 대상자에게는 부활의 기회가 된 셈이다. 이번 경선에서는 중대선거구가 시범도

입된 4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가 1명씩 늘어남에 따라 후보자 추가 공모 없이 기존 경선 참여자를 대상으로 패자부활전을 실시했다. 특히 패자부활전에서도 하위 평가 대상자들에 동일하게 20% 감산이 주어졌지만, 이들은 권리 당원 투표에서 조직력을 앞세워 살아오게 됐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의정 활동 평가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위 평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유지했지만, 이를 상쇄할 수 추가 경선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면서 상당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의견이다. 반면 의정 활동에 집중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일부 의원들이 탈락하면서 평가 기준과 경선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감산 제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며 "추가 경선에 새로운

선거구가 포함되면서 조직력이 없는 후보는 살아남기 힘든 구조인 만큼, 사실상 의정 활동 평가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날 총 4개 중대선거구 중 3곳에 대해 추가 후보와 기호 순위를 발표했다. 비위 의혹 후보 자격 심사로 경선 일정 연기된 복구 1선거구에 대해서는 조만간 2차 경선을 실시해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정호 대표, 두산로보틱스 김현수 상무, 뉴로메카 박중훈 대표, 클로봇 김창구 대표, 시즐 이지현 대표 등 로봇엔지니어들과 전남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앵커기업과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 모색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5개사와 기술 개발·실증·사업화 협약 조선·에너지·농수산 등 주력산업 접목해 경쟁력 높이기로

전남도가 국내 로봇 앵커기업과 협력해 산업현장 중심의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전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뉴로메카, 클로봇, 시즐 등 국내 로봇 앵커기업 5개사와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선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각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전남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협약은 전남의 넓은 산업부지, 풍부한 전력과 용수 등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조선·에너지·농수산 등 지역 주력산업에 첨단 로봇기술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남은 다양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로봇기술의 실증과 확산이 가능한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발판으로 로봇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로봇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새로운 관련 산업 시장을 창출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5개 기업은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전문인력양성 등 로봇산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지능형 로봇 분야 정책과 신규 국책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개발된 로봇기술의 산업현장 적용과 보급 확대에도 협력한다. 전남도는 앞으로 산업현장 로봇 실증

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유망 로봇기업 유치, 특화 클러스터 조성, AI·데이터 기반 로봇산업 고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위원 부지사는 "로봇산업은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서 인식·판단·행동으로 구현되는 피지컬 AI의 핵심 산업"이라며 "협약을 계기로 전남을 산업현장 중심의 로봇 활용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윤 '체포방해' 징역 7년...1심보다 2년 늘어

12·3 비상계엄 첫 항소심...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유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우선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법인도피교사), 내란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호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

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후도 없었다는 하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가이언스·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임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하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연합뉴스

시, 민원서비스 '최우수'...특교세 6000만원 확보

특·광역시 최초 2년 연속 선정...5개 항목 중 2개 '만점'

광주시는 29일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특전(인센티브)으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로 광주시는 특·광역시 최초로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해 전국 308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8곳, 광역자치체 17곳, 시·도 교육청 17곳, 기초자치체 226곳)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를,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광주시는 총점 94.12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9점 향상된 성적을 거뒀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등 2개 항목에서는 만점을 기록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역량을 증명했다. 광주시는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진행 상황 상시점검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부서간 협업체계 강화로 집단 고충민원 효율적 해결, 온라인 소통플랫폼 '광주ON' 및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통한 민원소통창구 확대, 불필요한 서류 감축 등에 힘썼다. 김동현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시민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추 "유가지원금 제한해제 검토" 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정차 주유소에서는 일부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 해제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는 제외된다. 피해지원금 소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영세 상인 등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거나 혼란을 준다는 불만도 일각에서는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이수석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유가 지원금이 아닌 고유가가 인한 민생 지원금이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풀어서 유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유치추진단 가동 첫 회의서 목표기관 추진상황 점검·실국 역할 분담

전남도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가시화됨에 따라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제2차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첫 회의를 열어 유치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황기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실국별 유치 목표 기관과 역할을 분담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수도권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도 커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광주시와 함께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

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0개 목표 기관을 발굴하고 기관별 유치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공동 대응했다. 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를 집중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유치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각 실국은 소관 분야별 유치 목표 기관의 임직원과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을 통해 전남의 정주 여건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홍보하는 등 현장 중심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청 "전문가 공무원 양성...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개방형 임용 늘리고 '연봉 상한' 폐지

청와대는 29일 공식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테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 공무원은 인공지능(AI), 국제 통상, 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기존 일반직 700명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강 실장은 밝혔다. 역할 있는 실무자를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직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개방형 임용 직위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 12%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직위에 따라 연봉 책정 기준의 상한을 없애고, 퇴직 후 취업 제한의 부담도 완화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